

社說

Tea Time 제도에 거는 기대

우리학교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달부터 Tea Time 제도가 시행된다. 양캠퍼스의 학생들을 10명 무작위 선출, 총장과 의 직접적인 대화를 갖는 자리를 마련하여 학교 생활에 대한 의견과 불만 사항을 듣고 학교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학교의 행정사항을 전달하는 기회를 갖는다는 취지이다.

학생들의 의견 및 불만 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이미 팩스를 이용한 올부즈맨 제도가 현재 시행되고 있지만 총장과 학생의 직접적인 대면을 통한 의사 소통은 그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학교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는 총장과 학생들의 직접적인 만남은 대학이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행정 체계에서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체제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준비 신호이다. 이를 계기로 학교 내에 교수와 학생, 교직원 사이에 상호 협동적인 의사소통이 널리 확산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지금까지 학교 내 구성원들 간 대화를 위한 창구 만들기 작업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작업들이 좀더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되지는 못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정보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는 현 시기에 있어서 적극적인 정보공유와 의사소통과정은 조직이나 단체의 발전을 기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 Tea Time제는 우리학교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토대가 될 수도 있는 제도로서 정착되어야 한다.

앞으로 제도 시행에 있어서 무작위로 선출된 학생들의 대표성의 문제와 의견 수렴 과정에서의 투명성 보장을 위한 전 과정의 공개 및 개방 등 많은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노력들이 한곳으로 모여 시행착오를 거쳐 의사소통창구를 정착,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교수와 학생, 교직원 모두가 변화하는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과 애교심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대학 인성교육 부재의 결과

안타깝다는 말 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지난 주 주차공간 문제로 인해 우리학교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건은 단지 한 사람의 돌발적이고 비이성적인 일로 치부하고 넘어가기 어렵다. 대학이 무한경쟁의 각축장으로 변질되는 과정에서 교육이 지나야 할 고유한 원칙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생각하게 할만큼 충격적인 일임에 틀림없다.

문제는 이 일로 해서 우리학교의 이미지가 어느만큼 실추되었고 반사적인 불이익이 어느정도인지가 아닌 것 같다. 굳이 군사부일체라는 교훈을 상기시키지 않더라도 어느 새인가 교수와 학생이 지나야 할 권위와 존경의 경계선이 무너져간다는 사실에 그 절박함이 있다.

우리는 이번 일에 대해 심정적이나나 학생측의 각성을 촉구하고 싶다. 사건의 발단이야 어떻든 배움의 입장에서 있는 학생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는 것은 지난날 선배들이 쌓아왔던 도덕성에 부합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또한 학생의 정당한 요구마저 빚을 바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수월교정의 학생회가 이번 사건에 대해 적절한 입장 표명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할 수 밖에 없다. 학생의 입장을 대변하고 대표한다면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일정한 책임을 지는 적극적인 모습이 아쉽다.

마찬가지로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교육을 시장의 논리로만 몰고가려는 학교측의 교육철학 부재도 아쉬울 뿐이다. 장본인을 찾아내고 그 학생을 징계하는 선에서 이번 사건의 갈등이 해소되리라고 본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안일한 대책이다. 권위와 존경은 짜여진 형식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스승과 제자가 공존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학교의 책임이라면 지금이라도 이번 사건과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의 교육풍토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하나의 돌발적인 사건을 놓고 마치 우리학교의 전반적인 분위기인 양 규정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교육이 사고파는 대상으로 변질되어 가는 최근의 과정은 언제라도 이번 사건을 재현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여진다. 미봉책 보다는 굵아 있는 환부를 도려내는 심정으로 이번 사건이 해결되기를 바란다.

시론

노동법안 개정, 경제회생 가능한가

엎어치나 매치나 매한가지

신민정
(경제학 석사 2기)

지난 14일 노동관계법 시행령이 형식적 여야합의를 거쳐 마무리됐다. 타결안은 핵심쟁점인 정리해고제의 요건을 강화하고 그 적용을 2년간 유예함으로써, 악화된 대국민 감정을 가라앉히는 한편 파행적 국정운영에 대한 비난도 무마하는 방향으로 제출됐다. 이로써 국가경쟁력강화를 명분으로 고용불안의 정당화를 피한 개정 노동법의 노동시장 유연화 전락은 정부의 편향된 관점과 비민주적제도에 대한 불신만을 거듭 확인한 채 일체의 성과를 남기지 못한 해프닝으로 막을 내렸다.

무한 경쟁시대 도래

현재 우리 경제의 위기는 낙후된 경제구조의 개편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다른 시대로 나아가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같은 시대적 대전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 기본틀의 변화를 바탕으로 한 새 패러다임의 설정이 필수적이다. 인류의 문명사는 '근대화·공업화 시대'로부터 '세계화·정보화 시대'로 대전환하고 있다. 즉,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변모하고 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단일시장에서 경쟁하는 무한 경쟁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국가와 기업발전의 핵심과제는 지식, 정보, 기술의 생산주체인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이들이 의욕적으로 일



▲개정 노동법안에 항의하는 노동자들

(사진 : 한겨레21)

노사 동등한 지위 통해 관계개선 돼야

할 수 있도록 조직과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다.

노사협의회 위상 찾기

지난 14일 발표된 노동법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대부분 조항의 유예와 철회를 거쳐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주요 쟁점사항으로 떠오른 변형근로제, 정리해고제 등은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생존권 위협행위이다. 이 부분은 산업구조조정에서 필수적인 고용의 유연화라는 일면 긍정적인 기능을 포함한다. 그러

나 재취업에 필요한 노동자의 재교육 및 실업 중 생계보장을 가능케 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선행되지 않는 한, 이는 개발독재의 연장선상에서 전성장·후진배의 모순을 되풀이할 뿐이다.

또, 개정의 본래 목적이자 국제기준의 핵심인 공무원, 교원의 노동권 보장이 제외된 점은 큰 오점으로 남았다. 교원의 단결권 부정은 필연적으로 교육의 정치중속화를 낳게 되며 이는 곧 교육의 후진화를 의미한다. 낙후된 이데올로기의 재생산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게 되면, 이

는 자라나는 세대의 시대인식을 가로막아 창의적 사고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요컨대 인식의 전환을 위한 사회비용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악순환을 그 자체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 외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앙·노·사·정 위원회 및 노사협의회 위상에 관한 부분이다. 현행 제도는 형식적인 구색맞추기라는 느낌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그러나 앞으로 민주적인 노사관계 정립 및 노동자 경영참여로 인한 선진국형 소유·분배구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노

·사 공동경영체제로의 이행이 필수적이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통분담론'이 현행과 같이 노동자의 '고통전담'이 아닌 실질적인 '고통분담'으로써 위기를 돌파할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노·사의 동등한 지위가 보장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가 경영에 참가할 수 있는 종업원 지주제도의 확충(장기적인 안목에서 현행 약 10%에서 50%정도로 확대되어야 한다)과 함께 노사협의회의 위상이 기업의 최종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이사회와 동등한 지위로 자리잡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노동계 불복종운동 전개

우리경제의 가장 큰 저효율은 실상 개별 중심의 경제구조로 인한 비효율적 경영 및 자원의 독점으로 인한 창의적 중소기업 발전을 저해하는데 있다. 또, 고질적인 정경유착으로 인한 부패구조로 사회적 거래비용이 매우 높다는 점 역시 걸림돌로 작용한다.

노동계는 이번 개정의 독소조항을 철폐하기 위해 불복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4, 5월의 단체교섭과 쟁의과정을 거쳐 전면적인 총파업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한다. 또, 대선때는 노동법 개악 정당화 낙선운동 등을 펼쳐 국민을 배신한 정당을 엄중하게 심판할 방침이라 한다.

이번 노동법 개정 파문으로 인한 국민적 공분의 에너지가 경제의 합리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새시대의 정치·사회·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초석으로 전환한다면, 이는 곧 대변혁을 위한 하나의 화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부패한 나라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있을 수 없다. 총파업과 차후의 공동임투가 대선까지 이어져 국민적 사회대개혁을 위한 담론이 형성되고, 노동자가 사회대개혁의 초동주체로 협의를 정치력을 이휘 경영참여로 인한 선진국형 소유·분배구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노

PC 폭력인가, 사랑의 매인가

통신원

학내처벌 금지위해 공식적 징계위원회 필요

'Y군은 지각을 이유로 교문에서 구타 당했다. 수 학시간엔 한 문제 못푸는데 10대씩 맞았고, 방과 후엔 청소를 깨끗이 못한다고 곤장을 맞았다'

'H군은 학교를 결석했다. 몸살 때문이었는데도 다음날 선생님께서 뺨을 서른네대나 맞았다'

'경기도 W에선 담임이 지각한 B양에게 행실이 불량하고 가정교육이 잘못됐다는 식의 심한 꾸중을 했다. 다음날 B양은 4층 옥상에서 투신자살을 했다' 위의 내용은 PC통신게시판과 일간지에 실린 교사체벌에 관한 사례이다. 대다수의 초·중·고교생들이 이렇게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일마전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조사발표에 따르면 학내 폭력고발사례에 대한 설문에서 교사에 의한 폭력사태가 약 5%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큰 비율은 아니지만, 문제는 학생들이 체벌을 더이상 '사랑의 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엄연한 폭력으로 인식한다는 데 있다.

교사체벌에 대해 PC통신에선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는 정당방위와 군사도발시의 방어진쟁뿐이라고 한다. 따라서 교사들의 폭력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ID : bronz95)

또한 체벌문제는 단순히 사제간의 감정대립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라 보는 견해도 있다. 부모들의 극성적인 교육열, 지나치게 많은 학생수 및 낮은 월급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왜곡된 형태로 학생들에게 반영된다는 것이다.(ID : fzzkj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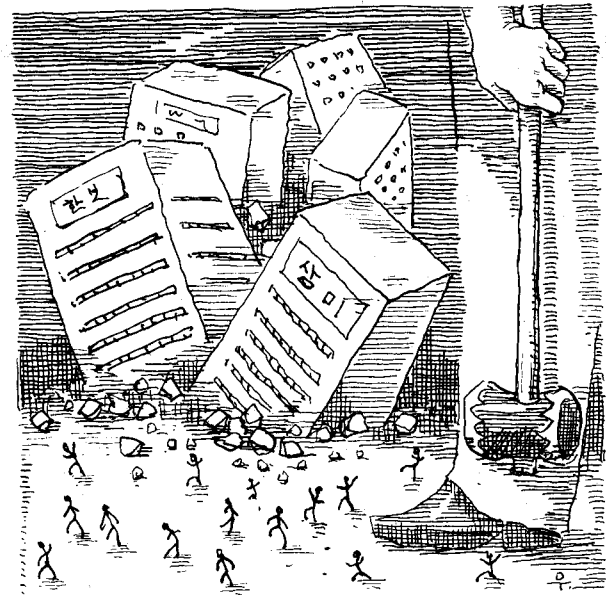
한편 도저히 말로써 선도가 안되는 학생들의 비행은 무시한 채 교사들만 비판해선 안되며(ID : sonyub), 좋은 교사들도 많은데 전체를 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도 있다.(ID : nodol7)

교사체벌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는 공식적인 징계위원회를 만들어 명백한 잘못이 인정될 때만 체벌이 가능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ID : 1004KHU)

전반적으로 학생인권 의 향상과 전인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를 위해서 체벌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통신원들의 의견이었다. (최용섭 기자)

고 황 만 평

김진우



“누가 무너뜨렸나?”

사랑과 믿음의 동부그룹

젊은 날의 꿈은 캠퍼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실현해 가는 보다 큰 캠퍼스 - 동부화재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만족을 이룩한 회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
인재를 키우고 한발 먼저 미래를 준비하는 회사,
캠퍼스 시절의 포부를 더욱 창조적이고 실제적으로
실현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회사 -
동부화재가 이루어가는 “창원기업”의 모습입니다.
자동차보험을 선도해온 동부화재 -
이제, 동부화재는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21세기를 열어갑니다.



자동차보험의 전통을 이어가는

동부화재

「동부화재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상시채용제도 운영중)」

●동부화재 인터넷주소
http://www.dongbuinsurance.co.kr
문의 : (02)262-3242~9